

세월호 10주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향해

✎ 전승우 기자 (경기도본부) | ⓒ 승인 2024.04.17 16:43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유가족과 대담 진행

세월호 10주기인 4월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진희, 이하 경기도본부)가 재단법인 4.16재단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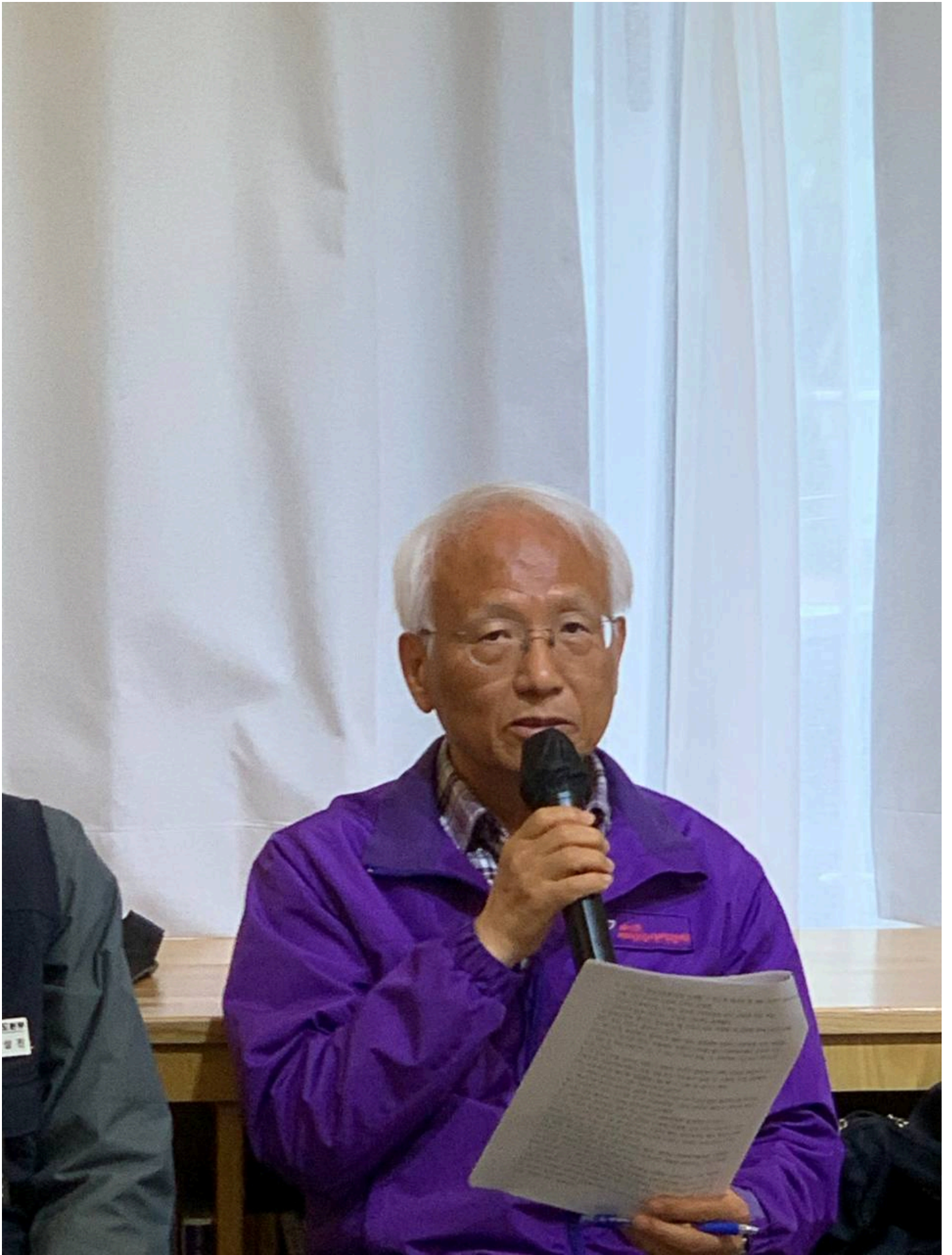
이야기마당의 참여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전승우

경기도본부는 지난 4월 13일 안산에서 세월호참사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쌓여온 여러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재발 방지책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리고 지금껏 10.29이태원참사 조사를 방해하는 등 중대재해와 참사를 은폐하고 회피하는 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중대(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은폐, 10.29이태원참사 조사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전승우

4월 13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본부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한 올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이야기마당>에서는 김혜진(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의 사회와 함께 임익철(10.29이태원참사 故 임종원 유가족), 이경구(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이 참여했고, 각 조직의 활동 경험 그리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임익철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전승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인 임익철 씨는 참사 유가족으로서 겪은 경험과 유가족협의회 활동 속에서 느낀 진상규명의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짚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진실 은폐 및 진상규명 회피, 책임자 처벌 회피, 유가족들과의 소통 단절 등이었다. 여기서 유가족들은 일부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고, 참사를 부정하는 세력과 이를 방관만 하는 국가,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겪어야 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인 이경구 공동대표는 참사를 겪으며 한국 사회가 시민들의 안전권 보장에 정말 취약하고 관계 기관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상실한 현실을 경험했다. 오송참사와 관련된 기관들 모두 참사 책임과 유가족들의 요구를 서로 떠넘기기 바빴고, 오송참사를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규정하며 무마하려는 시도와 여러 기관이 말단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지켜봐야 했다. 특히 유가족들의 진상조사 요청에 각 기관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대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로부터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전승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는 생명과 안전이 경시되고 경제와 물질적 가치만 우선인 한국 사회에서 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책위원회 같은 조직을 갖추고 투쟁을 통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사고 현장과 증거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과 이후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역행 등의 반노동 기조에 대해 반추하며, 산업재해의 40% 이상이 현재 법적용 유예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이후 이를 지켜내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더 결집시키고 모아내고 이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야기마당 참여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전승우

참여자 모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것과 함께 권력자의 의지와 성향으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사기구의 필요에도 한목 소리를 냈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 법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이해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시혜나 보상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안전권 보장, 독립적 진상규명, 피해자의 권리, 안전영향평가, 알 권리,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 추모와 애도 등 여러 항목을 담고 있다.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전승우

김진희 본부장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세월호 10주기인 올해 민주노총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첫 단추를 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연대에 더욱 힘을 쏟고 함께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며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 약속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전승우 기자 (경기도본부) ecjunid@naver.com